

아베정부의 일본재흥전략(2015년 개정판)

Contents

- 배경
- 2015년 개정판의 기본 관점
- 개정 전략의 주요 시책
- 2015년 개정판에 대한 평가
- 시사점

■ ■ ■ 목 차 ■ ■ ■

요약	1
I. 배경	3
II. 2015년 개정판의 기본 관점	5
III. 개정 전략의 주요 시책	7
IV. 2015년 개정판에 대한 평가	28
V. 시사점	29

*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재흥전략」 2015년 개정판(「日本再興戦略」改訂2015ー未来への投資・生産性革命ー)(2015. 6.)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요약

□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재흥전략」 2015년 개정판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함

* 원문 : 일본내각부, 「日本再興戰略」改訂2015 未來への投資·生産性革命 , 2015. 6.

* 출처 :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dai1jp.pdf>

□ 2015년 개정판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기존의 수요 확대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하에 경제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춤

- ‘미래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과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을 양대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목표로 성장 가속화 민·관 프로젝트인 ‘개혁 2020’을 설정함

□ ‘미래 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은 기업 거버넌스 강화, ICT 활용의 극대화, 개인 잠재력 개발 등을 3개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함

-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공격적 경영 여건 조성, IoT·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장시간 노동 해소 등을 통한 개인 잠재력 개발 등을 주요 시책으로 함

□ ‘로컬 아베노믹스’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함

-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의 수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과 더불어 의료·간호 및 관광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

□ ‘개혁 2020’는 자동주행, 수소사회, 첨단로봇 등의 분야에서 2020년까지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개혁·육성 전략 추진함

- 도쿄 올림픽을 글로벌 사회에 대해 자국 첨단산업 역량을 홍보·소개하는 쇼케이스로 활용한다는 전략임

< 일본재흥전략 2015년 개정판의 주요 시책 >

1. 미래 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
 - (1) '수익력' 향상을 위한 기업행동(미래지향적 투자) 촉진
 - i) '공격적' 기업 거버넌스 강화
 - 기업과 투자자의 건설적 대화 촉진 (주주에 대한 정보공개 촉진)
 - 성장지향적 법인세 개혁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대화
 - ii) 혁신·벤처 창출
 - '벤처 챌린지 2020' 추진
 - 미국 서해안 수준의 국제거점 형성 (특정연구대학, 우수대학원)
 - 실리콘밸리와 일본 간의 가교 프로젝트, 생태계 형성
 - 이노베이션 내셔널 시스템의 본격적 가동을 위한 대학 개혁
 - 운영비교부금의 중점 배분으로 대학 간 경쟁 촉진
 - iii) 아시아를 비롯한 성장시장에 도전
 -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 전개
 - (2) 새 시대에 대한 도전 가속화 ('제4차 산업혁명')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취업구조 변혁의 검토
 - 민간투자와 정책대응을 가속화하는 민·관 공동 방향성 책정
 - 보안 확보를 전제로 한 IT 활용의 철저화
 - 사이버 보안대책의 근본적 강화
 - IT 활용 추진, 자기번호 활용 범위의 확대
 - (3) 개인 잠재력의 철저한 개발
 - 장시간 노동의 해소를 통한 노동의 '질' 향상, 여성·고령자 등의 활약 촉진
 - 변혁의 시대에 대비한 인력 강화 (고용과 교육의 일체적 개혁)
 - 개인 커리어 개발, 실천적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창설
2. 로컬 아베노믹스의 추진
 - 중견·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수익력' 강화
 - 사업자의 성장전략 '가시화', '일괄지원거점' 강화
 -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 지역금융기관 등을 통한 경영 지원, 민·관 협동 생산성 향상 운동 (5개 분야), IT활용, 경영지원 참고지표(지역 벤치마크)의 책정
 - 농림수산업, 의료·간호(ICT화 포함),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
3. '개혁 2020'(성장전략을 가속하는 민·관 프로젝트)의 실행
 - 자동주행, 수소사회, 첨단로봇, 관광지 경영, 대내 투자 등

I 배경

1. 배경

□ (일본재흥전략의 개요)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상세전략으로 2013년에 「일본재흥전략」을 발표

- (추진경과) 아베정권 출범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탈피하여 경제 재건 목표 하에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음
- (일본재흥전략의 의의) 일본재흥전략은 아베노믹스의 제3의 화살로 불리며, 향후 10년 간 명목 경제성장률 3%, 실질 경제성장률 2%,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 150만 엔 등의 목표 제시

<표 1> 일본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 제1의 화살 :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대담한 금융정책'으로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무제한 양적완화, 엔고의 시정, 일본은행법 개정 등을 포함
- 제2의 화살 :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첩한 재정정책'으로 대규모 공공투자, 일본 은행의 건설국채 매입과 장기보유 등 10.3조 엔의 정부 지출을 결정
- 제3의 화살 :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으로 건강,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농림수산업 등의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민·관협동을 통해 일본 경제 성장을 추진

□ (일본재흥전략 2015년판 발표) 일본 정부는 2013년에 처음 발표한 「일본재흥전략」을 보완·강화하여 2015년 개정판을 발표

- (개정경과) 장기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발표된 일본재흥전략은 2014년에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된 이후 2015년에 2번째 개정 추진
- (2015년 개정판의 특징) 기존 전략이 수요를 견인하여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는 데 중점을 둔 것에 비해 2015년 개정판에서는 공급 측면의 경제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표 2> 일본재흥전략의 개정판 비교

	일본재흥전략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
시기	2013년 6월	2014년 6월	2015년 6월
모토	Japan is back	미래에 도전	미래에 투자 · 생산성혁명
주요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산업재흥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 - 인력육성과 고용제도 개혁 -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 추진 -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사회의 실현 - 입지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혁신 전략시장 창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건강수명' 연장 - 청정·경제적 에너지 수급 실현 - 차세대 인프라 구축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통상관계 구축 및 경제협력 추진 -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처 - 일본성장을 지원하는 자금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수익력 회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기업 거버넌스의 강화 ②공적·준공적 자금운용 등의 재검토 ③산업의 신진대사와 벤처의 가속화 ④법인세 개혁 ⑤이노베이션 추진과 로봇혁명 경제활동 참여인력 창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⑥여성의 활약 촉진 ⑦근로방식 개혁 ⑧외국인력 활용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역 지원산업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⑨공격적 농림수산업 전개 ⑩건강산업 활성화와 질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지역 활성화와 중견·중소 기업·소규모사업자 혁신, 지역의 경제구조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력 향상시킬 기업 행동 유인 - 새 시대에 도전 가속화 - 개인 잠재력 개발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수익력 강화 -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 농림·수산업, 의료·간호,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 - 지자체의 새로운 역할 (관제시장 민간 개방을 통한 신비즈니스 창출 등) '개혁 2020'*(성장전략 가속화 민관 프로젝트) 실행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역량의 최대 유인 정책단위 그룹 성과목표 (KPI)를 설정하고 공정표 작성, 진척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KPI)을 반영한 PDCA 사이클 성장전략 실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례 없는 속도로 정책 시행 - '국가전략특구'를 축으로 하는 개혁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시장 개혁, 농업생산성 확대, 의료·개호 분야의 성장 산업화 등 10대 주요 과제에 초점 법인세 개혁, 국가전략 특구에 대한 규제 철폐,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부족 해소에 주력했던 아베노믹스의 1단계를 마무리하고, 인구 감소 하에서 공급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아베노믹스의 2단계 대책 제시 2단계 대책으로 설비투자, 기술개발, 인재 육성 등 '미래 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 실현'과 일본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 독일 '인더스트리 4.0'에서 언급된 '제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

* '개혁2020'의 세부내용은 P.25 참조

II 2015년 개정판의 기본 관점

1. 전략 개정의 기본관점

- (개혁 추진의 경과) 일본은 금융완화 정책, 재정확대 정책에 이어 제3의 화살로 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개혁 분야) 농업, 의료, 에너지, 고용 등 고질적으로 규제가 강한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됨
 - (주요 시책) 법인세 개혁, 기업지배구조 강화, 경제협력 교섭 본격화 등 경영자의 '공격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이 잇달아 추진되고, '노사정 회의'를 활용한 임금인상이 추진됨
 - 법인세율 : '14년 34.62% → '15년 32.11% → '16년 31.33%

- (개혁 추진의 성과) 2년 사이, 기업 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고용 확대 및 임금 인상, 소비 회복세 등의 성과가 나타남
 - (설비투자 확대) 설비투자 금액이 2012년 64.7조 원에서 2014년 69.3조 엔으로 2년 사이에 약 5조 엔(7%) 증가했음
 - (기업 수익 개선) 기업 수익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도쿄 증시 상장기업의 2014년도(2015년 3월 기준) 순이익이 21.2조 엔으로 사상 최초로 20조 엔을 넘어섬
 - (고용 확대) 2년 사이에 취업자 수가 100만 명 증가하고, 유효구인 비율이 23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실업률은 3.3%로 낮아짐
 - (임금 상승) 기업수익이 2년 연속 임금인상으로 전용되면서 1인당 평균임금 인상률이 2015년 6월 기준 2.2%(대기업 2.5%)에 달했음

- (전략의 새로운 단계) 일본재흥전략은 기존의 수요 확대 전략에서 공급 제약 해소로 전략의 전환 필요
 - (생산성 향상) 인구감소에 대처하여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등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 불가피

- (투자 확충) 향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설비뿐 아니라 기술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요소임
 -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경제규모의 축소 등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 아베노믹스'의 추진 필요
- (전략의 양대 축) 2015년 개정판은 '미래 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과 '로컬 아베노믹스'를 양대 축으로 하여 공급부문의 혁신을 지향함
- (미래 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 단순히 생산성 향상이 아닌 '투자 확대'와 '혁신 창출'로 '부가가치 향상'을 뒷받침하는 전략을 추진
 -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는 경제 전체의 성장도, 아베노믹스의 성공도 없다는 인식 하에 지방 자력에 기반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
- (시책의 정비) 2014년 일본재흥전략 개정판의 진척 검증·검토를 바탕으로 새롭게 강구해야 할 구체적 시책이 추가됨
- (새로운 시책) 기존에 추진되던 대표적인 시책을 제외한 새로운 주요 시책은 <표 2>와 같이 정리됨

<표 3> 일본재흥전략 2015년 개정판의 주요 시책

1. 미래 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
 - (1) '수익력' 향상을 위한 기업행동(미래지향적 투자) 촉진
 - i) '공격적' 기업 거버넌스 강화
 - 기업과 투자가의 건설적 대화 촉진 (주주에 대한 정보공개 촉진)
 - 성장지향적 법인세 개혁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대화
 - ii) 혁신·벤처 창출
 - '벤처 챌린지 2020' 추진
 - 미국 서해안 수준의 국제거점 형성 (특정연구대학, 우수대학원)
 - 실리콘밸리와 일본 간의 가교 프로젝트, 생태계 형성
 - 국가 혁신시스템의 본격적 가동을 위한 대학 개혁
 - 운영비 교부금의 중점 배분으로 대학 간 경쟁 촉진
 - iii) 아시아를 비롯한 성장시장에 도전
 -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 전개
 - (2) 새 시대에 대한 도전 가속화 ('제4차 산업혁명')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취업구조 변혁의 검토
 - 민간투자자와 정책대응을 가속화하는 민·관 공동 방향성 책정
 - 보안 확보를 전제로 한 IT 활용의 철저화
 - 사이버 보안대책의 근본적 강화
 - IT 활용 추진, 자기번호 활용 범위의 확대
 - (3) 개인 잠재력의 철저한 개발
 - 장시간 노동의 해소를 통한 노동의 '질' 향상, 여성·고령자 등의 활약 촉진
 - 변혁의 시대에 대비한 인력 강화 (고용과 교육의 일체적 개혁)
 - 개인 커리어 개발, 실천적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창설
2. 로컬 아베노믹스의 추진
 - 중견·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수익력' 강화
 - 사업자의 성장전략 '가시화', '일괄지원거점' 강화
 -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 지역금융기관 등을 통한 경영 지원, 민·관 협동 생산성 향상 운동(5개 분야), IT활용, 경영지원 참고지표(지역 벤치마크)의 책정
 - 농림수산업, 의료·간호(ICT화 포함),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
3. '개혁 2020'(성장전략을 가속하는 민·관 프로젝트)의 실행
 - 자동주행, 수소사회, 첨단로봇, 관광지 경영, 대내 투자 등

III **개정 전략의 주요 시책**

1. 미래 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

(1) '수익력' 향상을 위한 기업행동 촉진

1) '공격적' 기업 거버넌스 강화

□ (기존 정책 평가) '14년 성장전략에서는 기업의 '수익력'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했음

- (주요 조치) '스튜어드십 코드'¹⁾와 '기업 거버넌스 코드'²⁾ 도입으로 기업경영의 규율을 세우고, 경영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시스템 추진
- (성과) 투자자를 고려하는 경영이 보편화되면서 상장기업 중 자기 자본이익률(ROE) 10% 초과기업이 1/3을 차지하게 되었으며('13년은 1/4), 복수의 독립사외이사를 선임한 상장기업도 크게 증가함

□ (전략 방향) 기업은 '수익력'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비뿐 아니라 기술, 인재를 포함한 적극적 투자와 공격적 경영을 전개해야 함

- (경영자 권한 강화) 이사회 역할과 이사 개개인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영자의 과감한 판단의지에 입각해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정보 공개 강화) 기업정보의 빠르고 효율적인 공개가 이루어 지도록 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증권거래소상장규칙 등의 정보 공개 법규를 재검토하고, 기업과 투자자의 건설적인 대화 촉진
-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금융기관은 기업 대상의 경영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기업의 수익력 향상 및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함

1) Stewardship Code. 생명보험사와 연금자금 운용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처 기업의 주주총회 등에서 감독해야 할 행동규범으로,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2015년 5월 말까지 127개사가 도입

2) Corporate Governance Code. 주주의 권리나 이사회 역할, 임원보수 방안 등 상장기업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망라한 것으로 2015년 6월부터 적용

- (민·관 대화 촉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기반정비의 방향성과 민간투자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대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과감한 중장기 경영판단을 지원함

세부 시책

- ▷ '공격적' 거버넌스 체제 강화
 - 이사회가 경영진에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및 사외이사의 활동 범위 등에 관한 회사법 해석지침을 작성·공표 ['15년 여름까지 작성·공표]
- ▷ 기업과 투자자 간의 건설적 대화를 촉진
 - 기업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규정을 수정하고 통합적인 공개 방향에 대해서 검토 ['15년 중 결론]
 -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신속화를 위한 소집통지 첨부서류 제공의 전자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조치에 대해서 검토 ['16년 중 결론]
- ▷ 금융기관의 경영지원 기능 강화 등의 추진
 - 금융기관의 구조·경영력 강화를 위해 독립 사외이사 선임이나 정책 보유주식 축소 등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가변동 위험 등의 감축을 요구
- ▷ 성장지향 법인세 개혁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장지향 법인세 개혁을 가능한 한 조기에 완료

2) 혁신·벤처 창출

① '벤처 창조의 선순환' 확립

- (혁신·벤처 필요성) 사회·경제·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혁신·벤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사회 지향
 - (미국 사례) 미국에는 대학을 구심점으로 기술시즈, 경영전문가, 투자자가 결합되면서 혁신적 벤처기업이 창출되고, 벤처기업이 인력, 기술, 자금을 끌어들이는 '벤처 창조의 선순환'이 확립

- (일본 현황) 일본 또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 등이 비즈니스·시즈 창출, 인재육성, 인맥형성, 성장금융 제공 등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전략 방향) 대학 개혁을 통해 벤처의 요람으로서 대학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행사·연계를 통해 '벤처 창조 선순환'을 창출함

- (대학 개혁)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시즈 창출, 인재육성, 네트워크 형성, 성장금융 제공 등을 통해 벤처 창출 근원지로서의 기능 강화
- (글로벌 연계) 일본의 기업·인재와 세계적인 벤처거점을 연결시킴으로써 '벤처 창조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한편, 핵심기술과 지식을 결집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거점을 창출
- (글로벌 벤처 서밋 개최)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세계적 경영자, 기업가, 벤처캐피털, 기관투자자 등을 초빙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을 도모하는 '글로벌 벤처 서밋(가칭)'을 개최함
- (벤처 챌린지 2020) 벤처 관련 시책을 유기적으로 통합·연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벤처를 창출할 2020년까지의 로드맵으로 '벤처 챌린지 2020'을 책정

세부 시책

- ▷ 국제적 혁신벤처 창출거점 형성을 위한 새로운 대학·대학원제도 창설
 - 일반 국립대학에 비해서 높은 자유성을 가지고 수익사업 등에 통해 자기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특정연구대학(가칭)' 제도를 창설하고, 기업의 투자대상으로 매력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 창출 [차기 통상국회에 법안 제출]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고려하여 여러 대학, 연구기관, 기업, 해외기관 등이 연계된 '우수대학원(가칭)'에서 문·리 융합 등의 일체적 교육을 촉진하는 혁신적 인재 창출 거점으로 활용 [16년부터 구체적 대응]
- ▷ 실리콘밸리와 일본 간의 가교 프로젝트
 -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일본의 기업·인재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파견하고, 현지 벤처지원기관 등과의 협력 하에 수행되는 제휴처·투자자 확보 활동을 지원 [15년부터 실시]

▷ 글로벌 벤처 생태계와 연동

- '실리콘밸리와 일본 간의 가교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2020년 대규모 '글로벌 벤처 서밋(가칭)' 개최. 이를 위해 벤처 관련 시책을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하는 2020년까지의 로드맵으로 '벤처 챌린지 2020' 수립 ['15년 말까지 수립]

② 국가 혁신시스템의 본격적 가동을 위한 대학 개혁

□ (기존 정책) 기존 성장전략은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 혁신시스템' 구축을 추진

- (주요 시책) 지식재산에서 파생된 혁신적 기술시즈가 비즈니스로 활용되도록 겸임제(cross-appointment) 등을 통한 산·학·연 연계 기능 강화와 연구개발법인의 기능 강화 등을 추진
- (향후 과제) 국가 혁신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아직 미완 상태인 국립대학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전략 방향) 국립대학이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기존 학문 분야의 계승·발전과 융합분야 등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도록 개혁 추진

- (인재육성 강화) 국립대학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사회에 적합한 인재육성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자기개혁 방향성) '국립대학경영능력전략'은 국립대학이 경영능력과 재무기반을 강화하면서 자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음
- (평가기반 지원) 국립대학의 자기개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비 교부금을 신축성 있게 배분함

세부 시책

- ▷ 운영비 교부금의 중점 배분 도입으로 대학 간 경쟁의 촉진
 - 새로 설치되는 국립대학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3개의 틀[※] 가운데 자기개혁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을 신축성 있게 배분 [15년 말까지 운영비 교부금 배분방법 공표]
 - ※) 3개의 틀(이하 중 하나를 각 국립대학이 스스로 선택)
 - 가) 지역공헌 및 강점·특색 있는 분야에서 세계적·전국적 교육연구 추진
 - 나) 강점·특색 있는 분야에서 세계적·전국적 교육연구 추진
 - 다) 대학 전반에 걸쳐 세계적으로 탁월한 교육연구·사회구현 추진
- ▷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적 연구비 개혁
 - 대학 개혁과 연구자금 개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부과학성과 내각부가 대학 등에 교부하는 경쟁적 연구비에서 간접경비를 30% 인정 [16년 신규 안건부터 조치]

3) 아시아를 비롯한 성장시장에 도전

□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특히 아시아 시장이 중요

- (수출-투자 병행) 상품·서비스 수출뿐 아니라 '질 높은 투자'를 통해 수출 상대국과 Win-Win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경제협력 중요성 부각) 글로벌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각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물건, 자금, 기술 등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을 촉진하는 경제협정 등이 중요해짐

□ (전략 방향) 현재 진행 중인 다국간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며, 대외 광역 종합개발 및 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강화

- (경제협력 협상 추진) TPP 협상의 조기 타결과 함께 일 EU·EPA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포괄 경제파트너십(RCEP), 한·중·일 FTA 등의 경제협력 협상을 적극 추진함
- (광역 종합개발 추진) 투자 규모가 크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는 광역 종합개발을 위해 민·관이 종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정부·민관과 협력하여 대책 마련·추진

- (질 높은 인프라 투자) 해외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JBIC³⁾의 기능 강화, 보상수당 제공 신제도 창설,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 등 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시행

세부 시책

- ▷ TPP, 일 EU-EPA 등의 경제 연계 추진
- ▷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의 전개
 -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 기존 대비 약 30% 증가된 1,100억 달러의 '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아시아 지역에서 실시. JBIC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상수당을 공급하는 신제도를 창설하여 고위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융자
- ▷ 해외 인프라 종합적 광역개발 추진체제 강화
 - 현지 민간기업·정부기관 등과의 협력·연계를 강화하고, 개발 프로젝트의 안건 발굴 활동을 강화. 개발 후보 건에 대해 현지의 과제·수요에 대응하는 제안을 패키지로 상대국에 제시하고 정부 횡단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

(2) 새 시대에 대한 도전 가속화

1) 다가오는 변혁에 대한 도전 ('제4차 산업혁명')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로봇기술의 범주를 넘어 비즈니스 및 사회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
 - (IoT·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사이버 세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경없는 디지털 공간이 확산되고, 인공지능의 불연속적 발전이 진행 중
 - (위기과 기회) 기업·산업이 단기간에 경쟁력을 잃거나 숙련인력의 지식·기능이 무용화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는 반면,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음

3)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주식회사국제협력은행법에 기초한 특수회사로 일본의 수출신용기관(ECA). 전신은 일본수출입은행

- (사회적 과제의 해결) 이 변혁의 흐름을 잘 활용하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나 에너지·지구 환경 문제 해결 가능
- (전략 방향)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 및 규제환경을 정비하고,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 정립 필요
 - (추세 점검) 향후 ICT 혁신의 도입 속도와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분야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의 내용, 정비가 필요한 법·제도 등에 대한 검토 시급

세부 시책

-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취업구조 변혁 검토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한 혁명시대에 대응하여 민간투자와 정책 대응을 가속시키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에 대한 영향, 민관에 요구되는 대응 등에 대해서 검토 [’16년 봄까지 검토]

2) 보안 확보를 전제로 한 IT 활용

- (보안을 전제로 한 IT 활용) IoT·빅데이터·인공지능 세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보안 확보를 대전제로 하여 IT 활용 극대화
 - (정부기관 사이버 보안 강화) 중앙부처, 독립행정법인, 공적 특수법인 등을 단계적으로 내각 사이버보안센터(NISC) 제도의 감시·감사 대상에 추가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
 - (민간 사이버 보안 강화) 보안인증제도 도입, 사이버 보안보험 보급,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보안을 강화하고, 주요 사회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 보안 강화방안을 강구함
- (제도상의 조치) IT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강구
 - (IT 수속 원칙화) 신청·신고 등 수속에 대해 기존의 대면·서면신청 원칙을 ‘IT 원칙’으로 전환하는 제도상의 조치 강구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 IT·데이터 활용이 국민의 편의성,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와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도록 규제·제도 개혁을 추진

□ (마이넘버 제도 활용) 2015년 10월부터 도입되는 마이넘버⁴⁾ 제도의 보안 강화와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함

- (보안 강화) 마이넘버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의 시스템 전체에 관한 감시 기능 도입 등의 보안대책을 강화
- (이용 활성화) 마이넘버의 이용 범위를 세금, 사회보장, 기타 행정 서비스로 점차 확대하면서 민간서비스에서의 활용도 검토함

세부 시책

▷ 사이버 보안의 근본적 강화

가) 정부기관 등의 대응능력 근본적 강화

- 공적 업무를 하는 특수법인 등을 내각 사이버 보안센터(NISC) 제도에 근거한 감시·감사 대상에 추가
- 정부기관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감지·분석 대처 능력과 감사 등의 충실도 강화
-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인터넷 분리나 전면적인 클라우드 이행을 위한 대책 강화 방침 정리

나) 민간기업의 대책 촉진

- 기업의 사이버 보안 대처 가이드라인 책정, 기업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제3자 평가 촉진, 기업의 사이버 보안 대처 등에 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책정 [15년 중]
- 사람들의 일상생활·경제활동에 필요한 사회기반(주요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 보안강화 방안 검토 [15년 말까지 결론]

다)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투자, 교육·인재육성 관련 활동 촉진

▷ IT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제상 조치

4) 일본정부가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관련 행정처리에서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별로 1개의 번호(마이넘버)를 부여하여 활용하게 하는 대책. 향후 금융 등 민간영역에서의 적용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 대면·서면 원칙을 'IT 원칙'으로 전환, 이사·사망 시 등 각종 행정수속 원스톱화, 공유경제 등 새로운 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조치 강구
- 의료·건강분야 등의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대리기관(가칭)' 제도를 창설하고, 민간사업자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 [차기 정기국회부터 관련 법안 제출]

▷ 마이넘버의 활용 범위의 확대

- 국가·지방 전체적으로 감시·검지 체제를 정비하여 마이넘버 제도의 보안을 철저히 확보
- 마이넘버 활용 범위를 세금, 사회보장, 호적, 여권, 재외동포 정보 관리, 증권 분야 등 공공성이 큰 업무로 확대 [최대한 조기에 법제상 조치 강구]

(3) 개인 잠재력의 철저한 개발

1) 저출산 대책, 노동의 '질 향상' 및 여성·고령자 등의 활약 촉진

- (인구 감소 문제) 인구 감소현상은 인력수급의 관점에서 일본 경제가 직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 (저출산 집중대책) 2015년도부터 5년을 '저출산 집중대책 기간'으로 규정하고 육아지원 강화, 결혼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 정비를 추진
- (장시간 노동의 시정) 단기적으로 공급 제약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노동 생산성 향상이 추진되어야 함
 - (노동의 질 개선 효과) 근로방식 개선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의 '질'을 높여 소득 향상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 촉진, 나아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
 - (노동시간 감소의 부대효과) 또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일본 전체의 소득창출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

-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적 변혁을 가능하게 함
 - (보육 대기아동 해소) 최근의 여성취업자 수 증대 추세를 가속화 하기 위해서 보육 대기아동 해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육 교사 확보 등을 착실히 추진
 - (실제 노동시간 가시화) 노동시간을 줄여 여성이 활약하기 쉬운 직장을 우대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각 기업의 노동 시간 등 근로 여건을 알기 쉽도록 함

- (고령자 활약 촉진) 근로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
 - (취업매칭 기능 강화) 고령자의 다양한 구직 요구에 섬세하게 대응 하는 취업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함

- (외국 인재 확보) 세계적으로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 우수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 (IT 인재 확보) 특히 향후 경제성장의 관건인 IT 인재 부족에 대응 하기 위해 인도, 베트남 등의 IT 인재를 중점적으로 확보
 - (관광분야 인재 확보) 방일 외국인 여행자 증대에 적극 대응하여 관광분야의 해외인재에 대한 수요를 파악·지원

세부 시책

- ▷ 기업의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장시간 노동의 시정
 - 여성활약추진법안 및 청년고용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기 위해 사업주 행동계획과 직장정보 제공 스킴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의 노동시간 상황 '가시화' 추진

- ▷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보육교사 확보
 -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한 보육교사 확보 및 어린이집 모범사례의 전국적 보급 추진. 또한,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에는 국가전략특구에서 '15년부터 교사시험을 연 2회 실시 (지역한정교사제도)

- ▷ 노인의 활약 촉진 (취업매칭 기능 강화)
 - 근로의욕이 있는 고령자의 다양한 고용·취업 기회나 취업매칭 기능의 비약적 향상·강화 도모
- ▷ 외국인재 활용
 - 인도, 베트남 등의 우수 IT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 톱레벨의 IT 계열 대학에 대한 일본기업 취업정보 홍보 강화. 해외 IT 계열 대학졸업생에 대한 유학·취업 지원 및 해외 IT 계열 대학 지정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진행 [15년 중]
 - 호텔·여관, 스노우 리조트, 통역안내 등의 관광분야에서 방일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해서 체류가 인정되는 요건 명확화

2) 변혁 시대에 대비한 인력의 강화 : 고용과 교육의 일체적 개혁

- (중신고용 시대의 종언) 빠른 경영 판단이 필요해지면서 기업이 평생 일자리를 제공하던 기존의 일본형 시스템 붕괴
 - (개인의 대응 필요성)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개인이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춰 능력이나 기술을 유연하게 갖추어가는 시스템을 사회 전체적으로 구축해야 함
- (전략 방향) 개인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함
 - (개인의 자기 점검) 개인이 지향하는 커리어와 그것을 위해 배워야 할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로 '셀프 커리어독(가칭)⁵⁾을 정비
 - (새로운 교육기관 창설) 개인에게 실천적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제도화

5) Self Careerdock. 근로자가 평가툴, 세미나, 직업상담 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를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부 시책

- ▷ 미래를 지지하는 인력 강화(고용·교육 시책) 패키지
 - 개인의 직업경력(목표 직업, 직무 경험 등)과 그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할 기회 ('셀프 커리어독(가칭)') 정비. 또한, 근로 의욕이 있는 중·장년층 인재의 재기 지원 등 시행
- ▷ 실천적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제도화
 - 산업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창설 [‘19년도 시행을 목표로 ‘16년 중 대책 마련]
- ▷ 예견 가능성이 높은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투명·공정·객관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체화를 위한 검토 및 제도 구축

2.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

- (지역사회 현황) 지방에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가 더 심각하며,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 심화
- (전략 방향) 지역사회의 자체적 역량을 활용하여 일본 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추진함

(1) 중견·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수익력' 강화

- (지역 중소기업 현황)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중견·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가 수요 감소와 인력 부족으로 존립이 위태
 - (수요 위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더불어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대기업에 대한 하청구조 등 기존의 거래 관계도 무너지고 있음
- (전략 방향) '자력'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도전을 지원해 나감

- (성장전략의 가시화) 신시장 개척이나 신상품 개발의 사례 전파 및 경영상의 과제와 해결책을 쉽게 정리·보급하는 성장전략 '가시화' 추진
- (세부 지원체제 강화) 중견·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세부 경영지원을 강화하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적극적 경영지원을 촉진

세부 시책

- ▷ 사업자의 '성장전략 가시화'
 - 새로운 상품개발과 시장개척을 원하는 사업자의 가이드가 되도록 성공비결을 정리하여 사업자·중소기업단체 등에 제공 [15년 중]
- ▷ 중견·중소기업 경영지원 체제의 강화
 - 지역 핵심기업의 레벨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해외 전개, 표준화 등을 세밀하게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원스톱 민원창구인 '일괄지원거점'의 기능·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 [15년부터]
 - 금융기관이 경영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의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신용보증제도 재검토 [15년 중]

(2) 서비스산업 활성화 · 생산성 향상

- (지역 서비스산업 현황) 서비스산업은 대부분 역내 수요에 의존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큼
 - (개별 지원의 어려움) 서비스 사업자 중에는 제조업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시행하기는 어려움
- (전략 방향) 민·관 협력으로 업종별 생산성 향상 활동을 전개함
 - (5개 중점 부문) 소매업, 요식업, 숙박업, 간호, 도로화물 운송업 등 5개 분야에서 제조업 '개선활동' 응용, IT·빅데이터·설비 활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응을 민·관이 함께 추진

- (지역기관 연계) 지역 내 중소기업 단체와 금융기관이 연계하여 경영지원 참고지표(지역 벤치마크) 등을 설정·공유하고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지원체제를 구축함

세부 시책

- ▷ 중소기업단체·금융기관의 지역 경영지원 강화
 - 중소기업단체, 지역금융기관 등의 지역기업 경영지원에 참고가 되는 평가 지표·방법(로컬 벤치마킹) 책정. 현장 프로세스 개선이나 IT활용을 지원하는 인재를 목록화하여 제공·공유 [15년 중]
- ▷ 민·관 협력으로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활동 전개
 - 제조업 등과 서비스업의 타 업종 제휴를 촉진하고, 소매업, 요식업, 숙박업, 간호, 도로화물운송업 등 5개 분야 협의회에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 전개

(3) 농림수산업, 의료·간호,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

1) 농림수산업의 '공격적 경영' 확립

- (6차 산업화 진전) 최근 농림수산업은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6차 산업화⁶⁾가 진전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 중
- (전략 방향) 농림수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비약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농정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감
 - (경영지원 체제 구축) 농림수산업 참여 사업자의 '공격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 중소기업 진단사, 지역금융기관 등의 경영지원 체제를 전국적으로 구축
 - (농지 활용 촉진) 지자체별로 농지 활용 실적을 가시화하고 유관시책을 마련하며, 유휴농지 등에 대한 과세 강화·경감을 검토하는 등 농지의 집적·집약화를 추진

6) 6차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 공산품(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함

- (수출 촉진) 향후 성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 품목을 중심으로 2020년 수출액 1조 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추진

세부 시책

- ▷ 농림수산업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정비
 - 도도부현 차원에서 농업법인화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 관련 전문가(세무사·중소기업진단사·지역금융기관 등)를 통한 법인화 지원체제 정비 [‘15년 중 목표 설정]
- ▷ 농지 집적·집약화를 위한 대처의 가속화
 - 농지중간관리기구의 농지 집적·집약화에 관련된 도도부현 실적을 등급과 함께 공표하고, 좋은 실적을 올린 도도부현에 대해서는 제반 시책 우대 [‘15년 이후 순차적 조치]
 - 농지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경감 등의 시스템에 대해 검토 [‘15년 중 검토]
- ▷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
 - 쌀, 쇠고기 등 향후 '성장성'이 큰 품목의 수출 촉진으로 '2020년 1조 엔' 수출 목표를 조기 달성

2) 의료 · 간호 ·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 · 생산성 향상

- (의료·간호·건강분야 현황) 의료·간호·헬스케어산업은 수요의 다양화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난 심화
- (전략 방향) 수요 다양화와 지역별 수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활성화·생산성 향상'의 관점에서 대응해나감
 - (산업 육성) 헬스케어 산업의 부족한 인력과 자금 공급을 뒷받침하여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맡게 함
 - (국제적 전개) 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
 - (ICT화 추진) 보안 확보를 전제로 2020년까지 5개년을 '집중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의료분야의 ICT화를 추진함

- (정보 연계) 현장 의료정보의 공유·활용으로 검사·처방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
- (데이터베이스화) 의료·간호정책에 관한 정보분석 및 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의약품 안전대책 및 연구개발의 발전을 도모

세부 시책

- ▷ 차세대 헬스케어산업의 창출 지원
 - 지역 차세대 헬스케어산업 협의회 설립, 네트워크화,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의 수평적 전개 강화.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VIC) 등과 연계하여 '지역 헬스케어사업 사업화 플랫폼(가칭)'을 창설하고, 투자 전 단계에서의 인재 육성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의 조정과 보상수당 공급을 일괄적으로 추진 ['15년 중]
- ▷ 의료의 국제 전개
 - 외국인 환자의 유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의 인증 및 외국인 환자를 수용할 의욕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의 '일본 국제병원(가칭)' 지정 ['15년 중 검토]
- ▷ 의료 등 분야에서 변호제도 도입
 - 보안 확보를 전제로 마이넘버 제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 등 분야에 변호제도 도입 ['18년부터 단계적 운용 개시, '20년까지 본격 운용]
 - 지역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와 연구개발 촉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분야 변호의 구체적 제도설계 및 고유번호가 붙은 개인정보 취급규칙을 검토 ['15년 말까지 결론]
- ▷ 지역의료정보 연계네트워크 / 전자 카르테(진료기록) 보급 촉진
 - '18년도까지 지역의료정보 연계네트워크의 전국화 실현. '20년도까지 병상 400개 이상 일반병원 전자 진료기록카드의 전국 보급률 90% 목표
 - 지역의료간호종합확보기금의 병상 기능분화·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비용 지원방안 등 강구. 차기 진료보수 개정 시에 ICT를 활용한 진료보수의 의료정보 연계 평가방식 검토
- ▷ 의료분야 등의 정책에 대한 데이터 활용 촉진
 - 의료·간호데이터의 정책 활용을 위한 구체적 시책, 실시 일정을 담은 '의료 등 분야 데이터 이용 프로그램(가칭)'을 책정 ['15년 중]

3)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

- (관광산업의 현황) 2년간 외국인 여행자 수가 약 500만 명 증가하고, 이들의 소비액이 2014년에 2조 엔을 넘는 등 관광산업이 급성장 중임
- (전략 방향) 방일 외국인 여행자 '2,000만 명 시대'에 대비하여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함
 - (공급부족 해소) 지역 관광 인프라의 공급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항 및 숙박시설 등 환경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매력적인 관광 지역 조성
 - (DMO 선정) 세계적 관광지 조성^{*} 마케팅을 전담하는 민·관 관광지 경영체(일본판 DMO⁷⁾을 선정하고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
 - (정부 대응) 정부는 관광정보 대외홍보, 다언어 대응, Wi-Fi 정비, 외국인 여행자의 이동·숙박·쇼핑 용이화 등 전반에 걸쳐 지원

세부 시책

- ▷ 일본판 DMO의 설립과 정책자원의 집중 투입
 - 지역의 관광 콘텐츠 개발, 방일 외국인여행자 유치환경 정비 및 해외홍보 등 관광지역 조성의 중심이 될 조직·기능(일본판 DMO)을 확립하는 모델 지역을 1~2군데 정도 선정하고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 ['15년 중 선정]
- ▷ 방일 외국인여행자 수 확대를 위한 지역별 공항·교통·숙박시설 확보 및 유치환경 정비
 - '방일 외국인여행자 2,000만 명 유치를 위한 지역 블록별 연락회'를 활용하여 공항·항만의 CIQ 체제, 공항용량, 교통, 숙박시설 확보 등에 대해서 현황, 과제, 대응방안 정리 ['15년 중]

7) DMO(Destination Management Marketing Organization)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조합한 관광지의 브랜드화, 웹·SNS 등을 활용한 홍보·프로모션, 효과적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지역 내 관광지 조성 추진 주체.

(4) 지자체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 (공공시설의 민간 개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는 지역의 주요 주체로, 강한 리더십과 현지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됨
- (전략 방향) 공공시설 등의 민간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창의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PPP⁸⁾/PFI⁹⁾를 구축함
 - (세부 조치) 공공시설의 민간 개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중점 대응이 필요한 시설과 개방에 대한 수치 목표를 수립하며, 민간 사업자의 규제완화 요청 등에 신속 대응
 - (기대효과) PPP/PFI는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 민간의 창의성을 살린 주민 서비스 향상, 효율화를 통한 공적부담 경감 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일석 삼조'의 효과

세부 시책

▷ PPP/PFI의 추진

- 'PPP/PFI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액션플랜(2013)'의 사업목표(10년간 12조 엔 규모)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 ['15년 중 결론]
-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 방식 강화를 위해 특구를 활용하는 등 운영권자에 관한 규제완화 추진

3. '개혁 2020'(성장전략 가속화 민관 프로젝트) 실행

- (개혁 2020 추진) 일본을 해외에 널리 알릴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모멘텀으로 개혁·혁신을 가속화하는 '개혁 2020'을 추진함
 - (세부 계획)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3개 중점 정책 분야에서 6개 프로젝트를 전개

8) Public Private Partnerships. 민·관이 연계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계획

9) Private Finance Initiative. '민간자금 주도'로 해석되며 민간으로부터 자금뿐 아니라 경영 노하우 등 민관이 가진 유형·무형의 경쟁력을 공공사업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과거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담당해 온 사회간접 자본의 정비 및 운영을 민간의 자금, 경영 노하우, 기술력을 도입해 민간주도로 시행하는 방식을 말함

- (추진 관리) 6개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엄격히 관리하여 2020년까지 실현을 목표로 개혁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시스템솔루션 수출

① 차세대 도시교통 시스템 자동주행 기술 활용

- (추진 방향) ITS의 민·관협력 추진기관이나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SIP¹⁰⁾ 연구개발 성과를 최대한 활용
- (세부 계획)
 -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 도쿄 임해부의 차세대 도시교통 시스템(ART)¹¹⁾ 실현
 - 자동주행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및 트릭 군집주행¹²⁾ 실현

② 분산형 에너지자원 활용을 통한 에너지·환경 과제 해결

- (추진 방향) 수소·신에너지 관리시스템 분야에서 일본의 주도권 확보와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세부 계획)
 -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생성되는 CO₂ 프리 수소 이용
 - 혁신적 에너지 관리시스템의 확립

③ 첨단 로봇기술에 의한 유니버설 미래 사회 실현

- (추진 방향) 모든 생활공간에서 로봇이 활용되며,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

10)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IP) :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기초연구에서 실용화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전략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11) Advanced Rapid Transit.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쉬운 이동 수단을 제공함'을 기본 이념으로, 자동주행의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도시교통 시스템

12) 앞차가 가속·감속, 차선 변경, 핸들 조향 각도 등 신호를 보내 뒤차가 이를 따라 똑같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④ 고품질 일본식 의료 서비스·기술의 국제 전개 (의료 인바운드)

- (추진 방향) 외국으로부터 의료서비스(진단·치료·검진)를 받기 위해 방일하는 환자를 적극 수용할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일본 내 의료 서비스 경험 기회를 확대

② 방일 관광객 확대를 위한 환경 정비 등

⑤ 관광 입국 쇼케이스화

- (추진 방향) 관광자원의 능력을 살리고 세계적 관광지를 조성해 관광산업을 일본의 기간산업 중 하나로 육성함
- (세부 계획)
 - 관광지역 : 민·관합동 관광지경영체(일본판 DMO) 선정, 다언어 번역 등 스트레스 없는 환경 정비, 해외홍보 강화
 - 도쿄 : 2020년까지 도쿄의 주요 터미널·역, 올림픽 경기시설, 인기 관광지 인근지역의 안내 시스템 등 강화
 - 나리타 공항 및 하네다 공항 : 공항 인근에 일본판 DMO로 선정된 지역에서 스트레스 프리 대응, 철도·버스의 공항 접근 개선, 공항을 게이트웨이로 한 정보거점 정비 등 추진

③ 대일 직접투자 확대와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향상

⑥ 대일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유치 방안

- (추진 방향) 대일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함
- (세부 계획)
 - 비즈니스 환경개선 성과의 적극적 홍보, 투자 안전의 발굴·유치 활동 전개, 규제·제도 개혁 가속화
 - 국제적 행사의 적극적 활용 및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최

IV 2015년 개정판에 대한 평가

- (일본재흥전략에 대한 평가 경과) 2013년 이후 2차례 개정된 일본 재흥전략에 대한 내부 반응은 매년 상이함
 - (2013년 전략) 2013년 6월에 발표된 일본재흥전략은 아베정권 최초의 성장 전략이라는 기대감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시각에 따라 일본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음
 - (2014년 개정판) 2014년 개정판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농업개혁, 기업 거버넌스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실효성이 높은 전략으로 재평가됨¹³⁾
 - (2015년 개정판) 2015년 개정판은 전년에 비해 정책 내용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일부 비판적 평가¹⁴⁾

- (2015년 개정판 평가) 2015년 개정판은 기존 정책의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러 과제도 안고 있음
 - (정책 일관성의 관점) 2013년과 2014년 전략이 제시했던 규제개혁과 수요 여건 개선 정책이 서서히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개정판도 정책 기조 유지·강화 관점에서 방향성이 옳다고 평가됨
 -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자신감 반영) 전년도 ‘디플레이션 탈출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금년 개정판에서는 ‘디플레이션 탈출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으로 바뀌는 등 정책추진의 자신감 반영¹⁵⁾
 - (신규시책 구체화 필요) 새로운 정책이 다소 부족한 가운데 여러 시책이 검토대상이 되면서, 상세내용이 확정되지 않음
 - (향후 장애요인) 2차 세계대전 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재정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이 향후 성장전략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¹⁶⁾

13)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0271010/>

14) http://www.agrnews.co.jp/modules/pico/index.php?content_id=33844

15) <http://www.daiwasbi.co.jp/column/attention/039/>

16) <http://www.recordchina.co.jp/a113720.html>

V 시사점

- (아베노믹스의 교훈) 일본은 공격적인 경제·산업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산업정책의 일관성 강화) 산업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이 모니터링·관리되어야 할 것임
- (정부의 전략적 리더십 회복) 국내외 산업여건 변화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전략적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함
 - (일본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대비) 일본이 공급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따라 대일 산업경쟁력이 최근 수 년 간의 양상과는 달라질 수 있어 국내 산업의 체질 강화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음
 - (ICT 부문의 경쟁 심화) 특히 ICT 부문은 일본이 집중적 육성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도 ICT 부문의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동아시아 3국간 경쟁 심화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정부 산업정책의 리더십 강화) 한국 기업들의 양적·질적 성장이 일본이나 중국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의 전략적 리더십을 재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가적 행사와 산업정책의 연계 강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국제적 행사를 국내 산업의 레벨업 및 홍보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일본의 올림픽 활용) 일본은 '개혁 2020'을 통해 관광 관련 부문뿐 아니라 자동주행, 수소사회, 첨단로봇 등 분야에서 도쿄 올림픽을 국제적 쇼케이스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평창 동계올림픽의 활용) 우리나라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하여 글로벌 사회에 국내 산업기술 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에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발간현황

□ 2014년

호수	제목	발간일
2014-01	글로벌 산업정책의 새로운 이슈와 트렌드	2014.01
2014-02	혁신형 제조공간, 팹랩(Fab lab)	2014.01
2014-03	미국의 혁신 클러스터 육성 현황	2014.01
2014-04	일본 경제산업성의 2014년 예산안 주요내용	2014.02
2014-05	2013년도 소재부품산업 동향과 이슈	2014.02
2014-06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혜기업 평가보고서	2014.02
2014-07	유럽연구영역(ERA)의 5대 중점과제 추진 현황	2014.03
2014-08	미국의 IT 산업전망 및 정책동향	2014.03
2014-09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	2014.03
2014-10	일본 산업경쟁력강화에 관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2014.04
2014-11	영국이 바라보는 제조업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2014.04
2014-12	OECD 국가의 기업 초기단계 지원제도 현황	2014.04
2014-13	미 상무부 중장기 전략계획	2014.04
2014-14	미국의 모바일 헬스 산업동향과 정부 정책	2014.05
2014-15	미국 연방정부의 2015년도 R&D 예산 개요	2014.05
2014-16	'14년 1사분기 소재부품산업 동향과 이슈	2014.05
2014-17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4	2014.05
2014-18	프랑스 유럽 2020 연구, 기술 이전 및 혁신을 위한 전략적 의제	2014.05
2014-19	2014 EFI 독일 연구 혁신 · 기술 역량 평가	2014.05
2014-20	2013 프랑스 중소기업 R&D와 혁신 전략	2014.06
2014-21	미국의 스마트 제조 및 연구 동향	2014.06
2014-22	NIST 3개년 혁신 계획	2014.06
2014-23	미국의 고용회복에서 제조업의 역할	2014.08
2014-24	산업정책 평가의 이슈와 교훈	2014.08
2014-25	헝가리의 R&D 및 혁신 전략 2013-2020	2014.07
2014-26	유럽의 전자부품 및 시스템 분야 정책 및 영향 분석	2014.07
2014-27	Global Marine Trends 2030	2014.08
2014-28	프랑스 혁신 전략 2030	2014.07
2014-29	미국 잉크젯 UV 프린터 분야의 기술 및 시장 동향	2014.08
2014-30	북미지역 복합소재 분야의 기술 및 시장 동향	2014.08
2014-31	미국의 병원 및 약국 정보 시스템	2014.08
2014-32	자율 주행 자동차 2020	2014.08
2014-33	미국 인쇄 전자 분야의 기술 및 산업동향	2014.08
2014-34	미국 스마트폰과 터치패널 분야의 기술 및 산업동향	2014.08
2014-35	미국 노트북 분야의 기술 및 산업동향	2014.08
2014-36	미국의 R&D 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관련사례	2014.08
2014-37	미국 제약산업 기업 동향 및 정부정책	2014.08
2014-38	'14년 상반기 소재부품산업 동향과 이슈	2014.08
2014-39	일본의 산업기술 혁신환경에 대한 평가와 제언	2014.09

호수	제목	발간일
2014-40	일본의 정책을 위한 과학 추진현황 및 평가	2014.09
2014-41	EU의 국제협력 2014(The European Un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4)	2014.07
2014-42	영국의 창조경제를 위한 선언문(A manifesto for the creative economy)	2014.08
2014-43	독일 ICT산업현황2013(Monitoring-Report Digitale Wirtschaft 2013)	2014.08
2014-44	2014년 UN 물 개발 보고서- 물과 에너지(Water and Energy)	2014.08
2014-45	영국 의료과학 산업의 전략분석(Stratgy for UK Life Sciences 2011, 2012)	2014.08
2014-46	유럽 건강 의료분야 동향(The European Health Report 2012)	2014.08
2014-47	일본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의 2015년 과학기술 예산안	2014.10
2014-48	세계 혁신 리더를 지향하는 독일의 기술혁신 정책 추진 현황- 「신 하이테크 전략」의 경과와 시사점	2014.10
2014-49	혁신을 가속화하는 규제심사 방법	2014.11
2014-50	유럽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과 시사점 -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 -	2014.11
2014-51	로봇시대의 도래가 법제도 및 정책에 주는 시사점	2014.11
2014-52	'14년도 3분기 소재부품동과이슈	2014.12
2014-53	제3의 IT 혁명을 주도하는 지능형 상호연결 제품(Smart, Connected Product)	2014.12
2014-54	미국 중소기업청 중장기전략 계획(2014-2018)	2014.12
2014-55	미국 첨단제조업 촉진 방안 보고서	2014.12

□ 2015년

호수	제목	발간일
2015-01	미국의 기술혁신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혁 방향	2015.01
2015-02	미국 사례로 본 고용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2015.01
2015-03	미국의 소재계놈 이니셔티브 실행계획	2015.01
2015-04	유럽의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이노베이션 공동체(Innovation Union) 추진현황	2015.02
2015-05	일본의 차세대 제조업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과 플랫폼 통합 전략	2015.02
2015-06	일본 '첨단 계측분석 기술·기기 개발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2015.03
2015-07	미국의 2015년도 R&D 예산 분석	2015.04
2015-08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2015.07

※ ~ 2015년 현재까지 발간물은 산업기술 종합서비스(www.itts.or.kr)를 통해 열람 가능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2015-09호]

아베정부의 일본재흥전략(2015년 개정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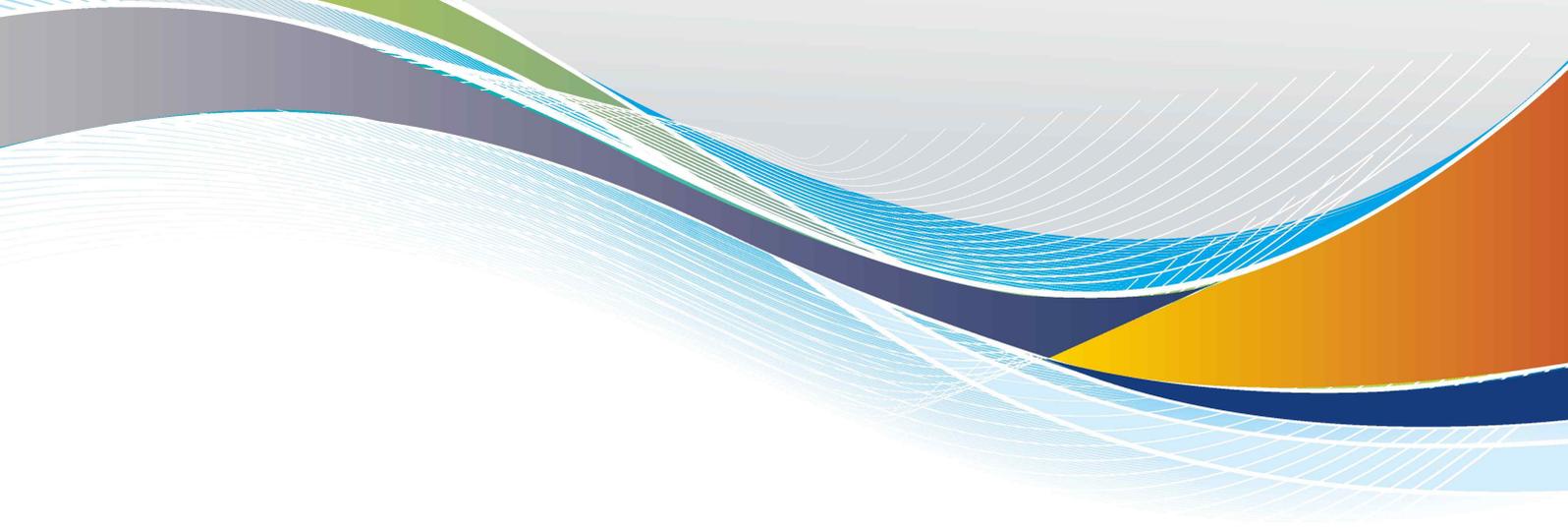
발 행 일 : 2015년 8월
발 행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가 격 : 비 매 품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www.kiat.or.kr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는 산업기술 종합서비스(www.itts.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베정부의 일본재흥전략(2015년 개정판)

기획 및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 성과분석팀

석근영 연구원 sky0228@kiat.or.kr / 02-6009-3284

한상영 팀장 syhan@kiat.or.kr / 02-6009-3280